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1. 17.(월) 12:00
(지 면) 2025. 11. 18.(화) 조간

중앙·지방정부, 세정혁신과 체납징수 강화 위한 현장 아이디어 공유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 지방세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지방세정 주요 현안·발전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7일(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이했으며,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이번 포럼은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과세 행정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2부)’로 구성됐다.
- 1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또한, ▲신고 안내·통지서 발송 등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세정혁신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 8건을 선정하고, 포럼 이튿날인 18일(화)에 시상(대상1, 최우수1, 우수6)할 예정이다.

□ 2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 대전 서구·대덕구, 경기 이천시, 충남 천안시, 서울 동작구·강남구 등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재난 대응·복구,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 등 → (개선) ‘출산·양육 지원’ 추가

□ 한편,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청남도 및 서천, 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한 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주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02)
		담당자	사무관	하현균 (044-205-3803)

